# 중소기업 자금실태 및 금융지원활성화 방안

## 중소기업 자금조달 이중고

초저금리시대의 정착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400조원의 부동자금이 투기자금화 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매출감소, 어음수취 증가, 결제기간 장기화 그리고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강화로 자금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금융이용 및 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전년상반기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9.5%로 조사되었다. 10개업체중 6개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납품대금에 대한 어음결제 비중이 증가하고 장기어음까지 떠안으면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 순수신용대출 비중이 13.1%에 불과하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은행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고 하나, 담보력과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소기업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것이다.

## 금융기관 이용문턱 높아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中企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이 여신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조사대상업체의 61.2%가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고, 담보인정비율은 축소(41.3%)하고, 대출한도도 축소(39.6%)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향후 연말결산을 앞두고 중소기업 금융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최근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 상환능력 위주의 심사 등 여신관리를 강화하여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업력 20년 전통의 의류를 생산하는 인천의 한 기업은 매출부진에 따른 일시적 수익률 저하로 결손을 기록한 결과, 금융기관이 협의도 없이 당좌대월 한도를 축소하고, 차입금 상환을 요구함에 따라 자금압박을 심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현주소를 나타내는 사례라 하겠다.

결국 제도금융권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급전을 구하기 위해 고리의 사채시장을 기웃거리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도업체수도 금년 1~9월까지 3,956개가 발생하여 전년동기에 비해 29.5% 증가하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금난에 견디다 못한 중소기업이 하나 둘 쓰러져 가고 있고 일부에서는 외환위기 때와 같이 연쇄도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CEO 64.7%가

3년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 금융환경 획기적 개선 시급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금융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년대비 28.2% 축소한(중소기업청 소관예산) 중소기업 예산을 최소한 금년도 수준으로 확대 조치해야 한다.

1999년 이후 정부재정규모는 매년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정부 전체 재정규모에서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3.30%이던 것이 2004년에는 1.1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 예산비중은 4.7%~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동 제도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의 주요재원으로 활용되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오던 총액대출한도가 11.6조원에서 2002. 10월부터 부동산 가격상승 등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9.6조원으로 축소하였고, 은행지원 금리도 연 2.5%에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총액한도대출재원을 11.6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은행지원금리도 2%로 인하하는 등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은 과도한 담보요구 자제, 대출연장 허용, 대출한도 및 대출상환 연장 등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가보다는 자산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지점(영업)장의 전결한도를 대폭 축소하였고, 담보인정 비율을 기존의 80%에서 50~60%로 하향 조정, 대출연장 중단 및 한도축소 등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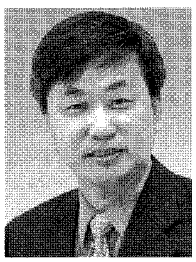
넷째,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지원금리를 인하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

그간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시설투자, 경영안정, 기술개발, 창업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금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1998년 이후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져 정책자금과 금융자금과의 금리차이가 사라져 정책자금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자금지원이 담보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담보가 부족하나 사업성,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금리를 3%대로 인하하고, 신용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융자 특별회계 예탁금리를 현재의 3.84%에서 2%대로 인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은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업회계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용대출 확대를 꼽고 있으나, 신용대출 위한 중소기업의 회계가 불투명하고, 정확하지 않아 신용대출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신용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업회계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 기술 및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제고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세제부 / 과장* ***정 욱 조***